

## 시리아 분쟁 3년: 현황과 전망

박재은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jepark@kiep.go.kr, Tel: 3460-1165)

## 차 례 ● ● ●

1. 시리아 분쟁 현황
2. 시리아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3.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

- ▶ 시리아 분쟁은 발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지속되어 24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분쟁이 장기화된 원인은 대내적으로는 반군과 정부군의 유사한 화력 수준, 반군의 내부 갈등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아사드 정권 제재 및 무력 개입 반대와 더불어 중동지역 내 종파갈등 확산 우려로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개입을 꺼렸기 때문임.
  - 시리아 경제는 분쟁으로 인해 약 1,031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70.8% 급등한 반면 외환보유고와 시리아 파운드 가치는 각각 2011년 대비 87%, 152%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
- ▶ 국제사회는 지난 3년간 시리아 분쟁을 해결하고자 정치·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미국, EU, 수니파 아랍국가들은 시리아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반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 종식을 위해서는 아사드 정권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러시아와 중국은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는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이며,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은 시리아 정부군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시리아 분쟁 해결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분쟁 종식 이후 시리아와의 경제적·외교적 관계 수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시리아국민우방국 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음.
  - 분쟁 종식 후 시리아 재건에 필요한 비용이 8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리아의 경제재건 프로젝트에 국내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시리아 분쟁 현황

## 가. 분쟁 경과 및 장기화 원인

■ 시리아 분쟁은 발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지속되면서 분쟁의 여파가 인접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시리아 분쟁은 국지적인 반정부 시위로 시작되었으나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무력 분쟁으로 격화됨.<sup>1)</sup>
  - 2011년 3월 15일, 남부 데라(Derra)에서 반정부 구호를 쓴 청소년들이 구금되자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확산되었음.
- 지난 3년간 시리아 분쟁으로 인해 2014년 3월 기준 사망자 14만 명, 난민 247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sup>2)</sup>
- 교전지대가 분쟁의 시발점인 남서부에서 동북부로 확대되면서 아사드(Assad) 정권으로 대표되는 시아파와 반군으로 대표되는 수니파 간 종파갈등이 레바논에 이어 이라크로 확산되고 있음.
  - 레바논과 이라크의 시아파 인구 비중은 각각 27%, 60~65%임.<sup>3)</sup>

■ 2013년 8월 국제사회가 금지선(red line)으로 설정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고조되었음.

- 2013년 8월 21일, 다마스쿠스 외곽 구타 지역에서 신경가스 사린(Sarin)이 포함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하였음 (그림 1 참고).<sup>4)</sup>
  - 국경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인해 355명이 숨지고 3,600명이 신경가스 중독 증상을 나타냈음.<sup>5)</sup>
-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 화학무기 공격 발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공격 주체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로 인해 실제 군사개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sup>6)</sup>

1) 시리아 분쟁의 발발 배경, 분쟁 초기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이권형·박재은(2012), 「시리아 유혈사태의 장기화: 배경 및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06-2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2)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http://syriahr.com/en/index.php?option=com\\_news&id=1926&Itemid=2&task=displaynews#](http://syriahr.com/en/index.php?option=com_news&id=1926&Itemid=2&task=displaynews#), UykNB6h\_u3s (검색일: 2014. 3. 19); UNHCR,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 (검색일: 2014. 3. 19). 2013년 7월 이후 UN은 사망자 집계를 중단한 상황임.

3)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122.html> (검색일: 2014. 3. 17);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j/drl/rls/irf/2012/nea/208400.htm> (검색일: 2014. 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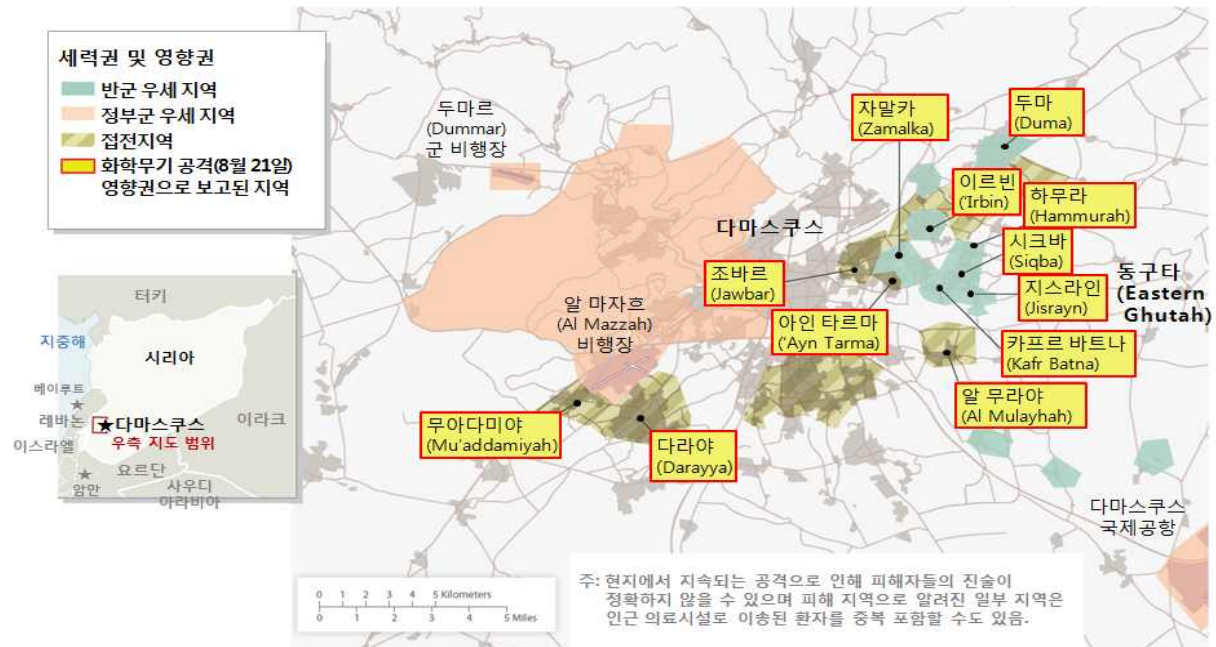
4) United Nations 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n the Syrian Arab Republic(2013), "Report on the Alleged Use of Chemical Weapons in the Ghouta Area of Damascus on 21 August 2013," p. 5.

5) "Syria: Thousands Suffering Neurotoxic Symptoms Treated in Hospitals Supported by MSF"(2013. 8. 24), *Doctors Without Borders*.

6) UN 화학무기 조사단에 따르면 대규모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구타 지역 외에도 칸 알 아살(Khan Al Asal, 2013. 3. 19), 시라케브(Saraqeb, 2013. 4. 29), 조바르(Jobar, 2013. 8. 24), 아사라피아 사흐나야(Ashrafiah Sahnaya, 2013. 8. 25) 네 개 지역에서 소규모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UN 화학무기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는 공격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정부와 반군 모두 화학무기 공격을 일체 부인하여 화학무기 공격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화학무기 공격 주체를 아사드 정권으로, 러시아는 공격 주체를 반군으로 규정하는 등 공격 주체에 대한 각국의 입장으로 인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상정된 군사개입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음.

그림 1. 화학무기 공격의 영향면(2013. 8. 2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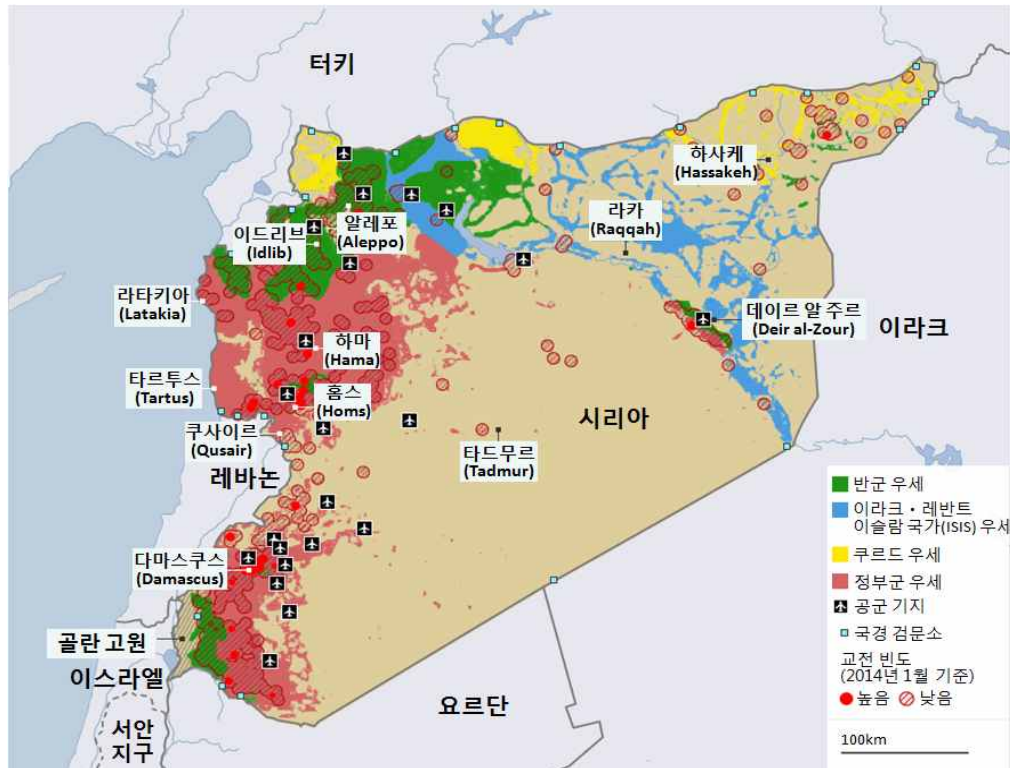
자료: The White House(2013. 8. 30), "Syria: Damascus Areas of Influence and Areas Reportedly Affected by 21 August Chemical Attack"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분쟁이 장기화된 원인은 시리아 내부적으로 볼 때 반군과 정부군의 유사한 화력 수준, 반군의 내부 갈등 등임.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주변 걸프왕정국가가 수니파 반군에 자금·무기 등을 지원하면서 반군의 화력이 강화되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 Assad) 시리아 대통령이 속한 알라위(Alawite)파가 시아파의 한 분파이기 때문에 주변 수니파 걸프왕정국가는 분쟁 초기부터 수니파 반군을 지원해 왔음.
- 한편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1,000여 개가 넘는 반군 단체가 조직되었으나 각 단체의 정체성, 투쟁 목적, 통치 체계 등이 상이하여 반군이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었음(그림 2 참고).
- 반군 내 주요 세력은 친서방적이고 세속주의 세력인 자유시리아군(Free Syrian Army), 온건 이슬람주의 단체인 이슬람 전선(Islamic Front), 과격 이슬람 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Al Nusra Front) 및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S: Islamic State in Iraq and Al Sham), 쿠르드 반군인 인민보호부대(Popular Protection Unit) 등이 있음.<sup>7)</sup>
- 특히 과격 이슬람 단체가 아사드 정권에 대한 투쟁보다 다른 반군 점령지에 대한 공격이나 점령지에 대한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전파에 집중하면서 반군 내 과격 이슬람 단체와 기타 반군 간 갈등이 심화됨.

7) ISIS의 Al Sham은 아랍어로 레반트(Levant)를 의미하며, 종종 ISIL(Islamic State in Iraq and Levant)와 혼용됨. 알 누스라 전선은 알 카에다(Al Qaeda)의 시리아 지부임.

그림 2. 시리아 분쟁 현황



주: 2014년 1월 기준임.

자료: Syria Needs Analysis Project, 재인용: "Syria: Mapping the conflict"(2014. 3. 13), BBC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편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아사드 정권 제재 및 무력 개입 반대, 중동지역 내 종파갈등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면서 분쟁이 장기화됨.

- 분쟁 발생 이후 UN 안보리 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아사드 정권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분쟁에 대한 개입은 내정간섭이며 분쟁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시리아 분쟁은 아사드 가문이 속한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갈등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경우 중동지역 내에 이란 중심의 시아파 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수니파 세력 간 종파갈등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커졌음.

## 나. 분쟁 이후 시리아 경제 동향

■ 분쟁 발발 이후 27개월 간 시리아는 약 1,031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sup>8)</sup>

8) Syrian Center for Policy Research(2013), "War on Development: socioeconomic monitoring report of Syria, second quarterly report (April - June 2013)," p. 21.

- 시리아정책연구센터(Syrian Center for Policy Research)에 따르면 시리아 경제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126억 달러와 49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2013년 상반기에만 4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표 1 참고).
- 분쟁으로 인해 약 27개월 간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총 1,031억 달러로 이는 2010년 실질 GDP의 174% 규모임.
  - 총 경제적 손실 중 자본 스톡(capital stock) 감소와 GDP 감소가 각각 48%, 47%를 차지하였으며 군비 증가는 5%를 차지하였음.

표 1. 시리아 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 추산

(단위: 백만 달러)

|          | 2011   | 2012   | 2013Q1 | 2013Q2 | 합계      |
|----------|--------|--------|--------|--------|---------|
| GDP 감소   | 6,460  | 23,543 | 8,173  | 9,725  | 47,901  |
| 자본 스톡 감소 | 5,144  | 22,711 | 14,589 | 7,196  | 49,640  |
| 군비 증가    | 951    | 3,246  | 602    | 728    | 5,527   |
| 경제적 손실   | 12,555 | 49,499 | 23,363 | 17,648 | 103,065 |

자료: Syrian Center for Policy Research(2013), "War on Development: socioeconomic monitoring report of Syria, second quarterly report (April - June 2013)," p. 21.

#### ■ 또한 환율 폭등과 물가 급등으로 인해 시리아 내 생활 여건이 열악해짐.

- 2013년 시리아의 외환보유고는 2011년의 13% 수준인 18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달러당 시리아 파운드 환율은 2011년 대비 151.9% 평가절하되었음.<sup>9)</sup>
  - 시리아 중앙은행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6~7월 총 1억 3,000만 달러를 매도하였고 8월 초 대통령령으로 민간부문의 외환 거래를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급감, 경제제재, 외환보유고 부족 등으로 인해 환율 상승세가 지속됨.<sup>10)</sup>
- 산업시설 파괴, 원자재 부족, 물류 및 치안 문제, 외환 부족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시리아 분쟁 발발 초기인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였으나 2012년 36.9%로 급등하였고 2013년에는 70.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sup>11)</sup>
- 그러나 아사드 정권이 통제하는 지역의 경제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볼 때 2013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487.3을 기록하였으나 주요 접전지인 알레포(623.4)와 라카(515.9)는 이보다 높았으며 아사드 정권의 기반 지역인 라타키아(437.2)는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음.<sup>12)</sup>
- 아사드 정권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수입을 중단시키고 정부가 직접 러시아, 이란 등 우방국에서 산용으로 수입한 뒤 민간에 재유통하는 국가통제 계획경제정책을 실시 중임.

#### ■ 분쟁 발발 이후 국내 분쟁 격화 및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9) EIU(2014), "Country Report Syria February 2014," p. 8.

10) Jolly, Jake(2013. 3. 14), "Syrian pound continues managed downward slide, devalued 39% in 2012," IHS Global Insight.

11) EIU(2014), "Country Report Syria February 2014," p. 8.

1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ex," <http://www.cbssyr.sy/index-EN.htm>(검색일: 2014. 3. 17).

2014년에는 분쟁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 것으로 예상되어 마이너스 성장은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시리아 분쟁으로 인해 2011년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한 데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도 -18.8%, -19.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표 2 참고).
- 특히 국제사회의 시리아산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2010년 시리아 GDP의 23.0%를 차지하던 원유 관련 제품 수입(收入)이 2013년 2/4분기 5.4%로 감소하였고, 원유 생산량도 2008~10년 기간 일일 40만 배럴에서 2013년 2만 5,000배럴로 급감함.<sup>13)</sup>
- 2014년에도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군이 통제하는 지역이 다소 안정되면서 사업 환경도 2013년에 비해 개선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인해 추가적인 UN 안보리 제재의 채택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1%대 후반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표 2. 시리아의 거시경제지표(2010~15년)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실질 GDP 증가율 (%)    | 3.2    | -3.4   | -18.8  | -19.0  | 1.8    | 2.3    |
| 명목 GDP(백만 달러)     | 60,185 | 52,591 | 44,061 | 37,810 | 34,319 | 34,004 |
| 1인당 GDP(달러, PPP)  | 4,958  | 4,823  | 4,058  | 3,553  | 3,722  | 3,856  |
| 인구(백만 명)          | 21.5   | 21.8*  | 21.4   | 20.1   | 19.9   | 20.0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4    | 4.8*   | 36.9*  | 70.8   | 22.5   | 15.2   |
| GDP 대비 경상수지(%)    | 0.2    | -14.1  | -7.7   | -14.2  | -13.6  | -14.5  |
| GDP 대비 재정수지(%)    | -2.2   | -6.4   | -14.4  | -13.2  | -9.9   | -7.9   |
|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 19,519 | 14,443 | 4,793  | 1,895  | 1,799  | 1,674  |
| 환율(달러 대비 환율, 연평균) | 46.51  | 48.25  | 64.51  | 109.76 | 169.28 | 190.40 |

주: \*는 실측치, \*\*는 전망치, 나머지는 추정치임.

자료: EIU(2014), "Country Report Syria February 2014", p. 8; IHS Global Insight(2014), "Country Intelligence: Report Syria February," p. 11, p. 22.

## 2. 시리아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 가. 개요

■ 국제사회는 지난 3년간 시리아 분쟁을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UN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시리아 분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국제사회는 '시리아 국민우방국 회의(Friends of Syrian People)'를 구성하고 2012년 2월 한국을 포함한 83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13) EU는 지난 4월 제재를 완화하여 반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수입을 허락함.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eia.gov/countries/cab.cfm?fips=SY>(검색일: 2014. 3. 17).

참여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2012년 4월, 안보리는 결의 2042호를 통해 당시 UN-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공동 특사인 코피 아난(Kofi Annan)이 제안한 6개 조항안(Six-Point Proposal)을 공표하고 안보리 결의 2043호를 통해 이행을 촉구함.<sup>14)</sup>
- 2012년 6월, 국제사회는 제네바 회의에서 행동그룹(Action Group)을 구성하고 현 정부와 야권을 포함한 과도 정부 구성을 촉구하는 제네바 합의(Geneva Communiqué)를 공표함.<sup>15)</sup>
- 2013년 9월,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118호를 통해 8월에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고, 시리아 내 화학무기의 사용·개발·생산·획득 금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화학무기 이전 중단, 2014년 상반기 내 화학무기물질 폐기를 촉구함.
- 2013년 9월,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마련한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 구상(Framework for Elimination of Syrian Chemical Weapons)'은 시리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UN 헌장 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sup>16)</sup>
- 현재 안보리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감독 아래 미국, 영국 등이 제거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시리아가 보유한 1,300톤의 화학물질 대부분이 해상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초, 제네바 II 회의에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분쟁 이후 첫 대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sup>17)</sup> UN 안보리는 시리아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 2139호를 채택함.

-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이 동시에 참여하는 제네바 II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리아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 2139호를 채택함.
- 국제사회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을 모두 포함하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반정부 세력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개최가 지연되었음.
- 제네바 II 회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라크다르 브라히미(Lakhdar Brahimi) UN-아랍연맹 특사 주재로 1월 22일과 24일 각각 스위스 몽트뢰(Montreux)와 제네바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이상이 회의에 참여함.
-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인 시리아국가연합(SNC: Syrian National Coalition)은 첫 대면 협상에서 구호품 지원, 포로 교환 등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양측은 교전지인 홈스(Homs)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데에 동의함.
- 이 회의는 정치·외교적 해결 방법인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나, 핵심 사안인 과도정부 구성, 아사드 대통령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양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분쟁 종식에 기여할 만한 성과 없이 종료되었음.

14) 6개 조항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권형·박재은(2012), 「시리아 유혈사태의 장기화: 배경 및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06-2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15) 행동그룹은 UN-아랍연맹 특사,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터키, 이라크(아랍연맹 정상회의 의장국), 쿠웨이트(아랍연맹 외무장관회의 의장국), 카타르(아랍연맹 아랍 후속 회의(Arab Follow-up Committee) 의장국),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로 구성됨.

16) UN 헌장 7장에 따르면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평화를 위협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또는 침략 행위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7) "Syria: Civilians to be allowed out of Homs, UN-Arab League envoy says"(2014. 1. 26), *UN News Centre*.

- 한편 2월에는 UN 안보리가 민간인 공격을 중단하고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 2139호를 채택하였으나 인도주의적 지원에 국한되어 실질적인 조치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sup>18)</sup>

## 나. 반아사드 성향

■ 미국은 시리아 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아사드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 반군에 대한 비살상(non-lethal) 무기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시리아 정부 및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시리아 정부의 경제적·군사적 능력 확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반군 점령 지역의 경제재건과 반군 및 시리아 국민 지원에 관련된 특정 부문의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함.<sup>19)</sup>
- 분쟁 초기 미국은 반군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고려하지 않았으나, 분쟁이 장기화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친서방 성향의 온건한 반군을 선별하여 비살상 무기 지원을 시작함.
  - 미국은 분쟁 발발 이후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공공서비스 제공, 법치(rule of law) 확대, 반군 점령 지역 내 안정 강화 등을 위해 식량, 발전기, 구급차, 방한 장비, 방어용 무기 등 약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비살상 지원을 제공하였음.<sup>20)</sup>
- 오바마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금지선을 넘었다고 보고 국지적인 군사 대응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최근 미국은 과도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 아사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향후 시리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sup>21)</sup>

■ EU 또한 시리아 분쟁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입장으로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 시행, 시리아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반군에 대한 비살상 지원 제공 등을 시행 중임.

- EU는 2013년 4월 대시리아 제재 내용을 수정하여 반군에 비살상용 무기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함.
  - EU의 기존 대시리아 제재는 무기·석유 금수 및 금융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였음.
- 화학무기 공격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군사개입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음.

18) "Unanimously approv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demands aid access in Syria"(2014. 2. 22), *UN News Centre*.

19) 해당 부문은 상수도, 위생, 농산품 및 식품가공, 발전, 원유 및 가스 생산, 건설, 엔지니어링, 교통, 교육 시설 등임.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r/pa/prs/ps/2013/06/210577.htm>(검색일: 2014. 3. 16).

20)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r/pa/prs/ps/2014/01/220029.htm>(검색일: 2014. 3. 16).

21) Mirage, Rancho(2014. 2. 15), "Obama says considering new pressure on Syria's Assad," *Reuters*.

- 당시 영국은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내세워 UN 안보리에 군사제재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도 군사개입을 반대하여 결국 무산됨.
- 프랑스는 영국이 불참하더라도 미국의 군사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역시 의회의 반대로 군사개입이 불가능해지자 프랑스의 군사개입도 무산되었음.

■ 수니파가 다수인 터키는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고 있으나,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국내 안보 불안 증가와 쿠르드족의 세력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음.

- 터키 내 일부 시아파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터키인들은 아사드 정권에 부정적이며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입장임.
- 터키는 주시리아 대사관 폐쇄, 이스탄불에서의 제2차 ‘시리아국민우방국’ 회의 주최, 시리아국가연합 및 자유시리아군 등 반정부 세력의 터키 내 활동 허가 등 반아사드 입장을 고수해 옴.
-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대에서 안보 불안이 급증하자 터키는 NATO에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요청하기도 함.
- 터키 남부는 시리아 북부와 국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분쟁 이후 수차례 터키 남부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사상자도 발생함.
- 분쟁 이후 시리아 내 쿠르드 자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터키 정부는 자국 내 쿠르드족이 자치 권한 확대를 요구하여 정정불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sup>22)</sup>
- 터키의 쿠르드노동당(PKK: Kurdistan Workers Party)은 약 30년간 터키 정부에 자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걸프왕정국가들의 지원 대상은 세속주의 반군뿐만 아니라 온건 성향의 이슬람주의 반군도 포함하는 등 서방에 비해 다소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반군에 대한 핵심 지원세력으로 인도주의적 지원뿐만 아니라 요르단 국경을 통해 무기 및 재정 지원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의 친서방 세속주의 성향의 반군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온건한 이슬람주의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서방이 우려하는 과격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 친아사드 성향

■ 러시아는 시리아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친아사드 성향을 보임.

- 러시아는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아사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동 내 강력한 동맹국을 잃기 때문에 내정 불가침 원칙을 내세워 아사드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 및 반군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음.
- 시리아는 러시아의 오랜 무기 수출 대상국이자, 중동지역 유일의 러시아 군항을 자국 내 타르투스(Tartus)에 허용한 군사적 동맹임.<sup>23)</sup>

22) 쿠르드족은 나라가 없는 민족 중 최대 규모로 약 2,500만 명 이상이며,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에 걸쳐 거주하고 있음.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시리아 무기 수출 규모는 분쟁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24)</sup>
- 러시아는 UN 안보리에서뿐만 아니라 제네바 회의에서도 친아사드 성향을 고수해 옴.
- 시리아 분쟁과 관련된 7건의 결의안 중 UN 감시 임무나 화학무기 제거에 관한 4건은 채택되었으나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 3건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제네바 합의 작성 시 러시아가 초안의 “평화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과도정부 구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문구의 삭제를 요청하여 최종 합의문이 “시리아 내 모든 당사자가 과도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되기도 하였음.
-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이 반군에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군 내 극단주의자의 세력 확장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난함.

■ 중국 또한 시리아 분쟁에 대한 개입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이며 시리아 분쟁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은 시리아 분쟁에 대한 개입을 내정간섭으로 보고, UN 안보리에 상정된 아사드 정권 제재안에 대해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veto)을 행사해 왔음.
-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화학무기 폐기 등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및 증진에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안은 찬성해왔음.
- 중국은 2012년 말 브라히미 UN-아랍연맹 특사에게 시리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4개 조항안(4-point plan for Syria)을 제안하였으나 기존 평화안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평화안이었음.<sup>25)</sup>
- 4개 조항안은 모든 분쟁 당사자의 폭력 사용 중단, 각 세력의 대표 임명 후 과도정부 구성 논의, UN-아랍연맹 특사의 중재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 시리아 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 등을 제안하였음.
- 한편 중국은 러시아·이란과 더불어 시리아 정부에 매월 5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sup>26)</sup>
- 카드리 자밀(Kadri Jamil) 시리아 경제 부총리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각각 위안, 루블, 리알로 거래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밝힘.

■ 이란을 비롯하여 시아파 인구가 많은 레바논, 이라크는 아사드 정권에 우호적임.

-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시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란-이라크-시리아-

23) 타르투스시는 시리아 서부 연안의 항구 도시로, 타르투스에 위치한 러시아 군항은 구소련 시절 개설된 해외 군항 중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르투스를 비롯한 서부 연안 지역은 아사드 가문이 속한 알라위파와 시아파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대표적인 정부군 우세 지역임(그림 2 참고).

24) 러시아의 대시리아 무기 수출 규모는 2009년 7,200만 TIV(Trend Indicator Values, SIPRI의 무기거래량 지표)에서 2010년 2억 4,800만 TIV, 2011년 2억 9,200만 TIV, 2012년 3억 5,100만 TIV, 2013년에도 3억 5,100만 TIV를 기록함(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Arms Transfers DB, <http://portal.sipri.org/publications/pages/transfer/tiv-data>, 검색일: 2014. 3. 17).

25) Zhi, Chen(2012. 10. 31), "China announces new proposal on Syria," *Xinhua*.

26) Peel, Michael(2013. 6. 27), "Iran, Russia and China prop up Assad economy," *Financial Times*.

레바논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역내 시아파 세력이 확산되기를 희망함.

- 이란에 있어 시리아는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자금·무기·병력 등의 지원 시 활용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sup>27)</sup>
  - 이란혁명수비대가 시리아 정부군을 훈련시킨 정황과 시리아 정부군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란산 미사일 (Fateh A-110) 및 로켓 발사대(Falaq-1, Falaq-2)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음.<sup>28)</sup>
- 이란이 시리아에 대한 신용 한도액을 70억 달러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량과 석유 제품의 수입을 위한 신용을 무제한으로 공여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sup>29)</sup>
-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공공연하게 시리아 정부군에 무기·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군과 연합하여 교전에 참여하기도 함.
  - 헤즈볼라 소속 사령관과 대원들이 자유시리아군과 전투 중 사망한 사례도 있었으며,<sup>30)</sup> 최근에는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이자 레바논 인접 지역의 반군 거점이었던 야브루드(Yabroud)를 장악함.<sup>31)</sup>
- 이라크는 시아파 집권 국가이고 시아파 인구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나, 이라크 정부는 대미 관계를 의식하여 2012년 1월에 시리아행 이란 화물기를 강제 착륙시켜 무기 수송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이란 국적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하여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원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았음.<sup>32)</sup>

### 3. 전망 및 시사점

#### 가. 향후 전망

■ 시리아 분쟁은 2014년에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지속되면서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시리아 분쟁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제네바 II 회의도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시리아 외부 환경보다 내부 환경 즉, 아사드 정권과 반군 간 교전 경과가 향후 시리아 분쟁 국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아사드 정권과 반군의 군사력은 대등한 수준으로, 아사드 정권과 반군은 각각 남부·서부, 북부에서 우세를 나타내며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음.
  - 반군은 2013년 초 시리아 주요 도시를 장악하며 우세를 보였으나 2013년 말 반군의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음.

27) 이란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레바논 헤즈볼라에 군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

28) Barnard, Anne, Michael R. Gordon and Jodi Rudoren(2013. 5. 4), "Israel Targeted Iranian Missiles in Syria Attack," *The New York Times*; Saul, Jonathan and Parisa Hafezi(2014. 2. 21), "Iran boosts military support in Syria to bolster Assad," *Reuters*.

29) Peel, Michael(2013. 6. 27), "Iran, Russia and China prop up Assad economy," *Financial Times*.

30) "Hezbollah military commander 'killed in Syria'"(2012. 10.2), *BBC*.

31) "Syria 'recaptures rebel border town Yabroud'"(2014. 3. 16), *BBC*.

32) Gordon, Michael R., Eric Schmitt and Tim Arango(2012. 12. 1), "Flow of Arms to Syria Through Iraq Persists, to U.S. Dismay," *The New York Times*.

- 정부군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반격을 가하였고, 2014년 초에는 수도 다마스쿠스와 하마, 홈스 등 주요 도시를 재탈환하며 우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참고).
- 최근의 정부군 우세에도 불구하고 분쟁 장기화로 인해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북부와 동부까지 장악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반군이 요구하는 아사드 대통령의 퇴임도 서방국가의 군사적 개입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반군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고 시리아 분쟁이 인접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리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됨.

- 시리아 반군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뿐만 아니라 반군과 반군 간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임.
- 각 반군 세력의 민족, 정치 성향, 분쟁 참여 목적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군간 교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초 발생한 알 누스라 전선과 ISIS의 교전은 극단 이슬람주의 세력 내부로 분열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줌.
- 또한 시리아 외부에서 유입된 약 7,000명의 극단주의 무장 전투원들이 시리아 분쟁에 참여하면서 분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임.<sup>33)</sup>
- 종파간 분쟁이 주변 아랍 국가인 레바논과 이라크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레바논에서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극단주의 수니파 세력이 각각의 근거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음.<sup>34)</sup>
-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 고원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발생하였으며,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시리아를 통해 골란 고원에 폭탄을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sup>35)</sup>

■ 반면 시리아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시리아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시나리오는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이나 특정 세력의 압도적인 우세에 따른 분쟁 종식을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UN 안보리에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또한 정부군과 반군 중 어느 쪽의 군사력도 결정적으로 우세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특정 세력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하여 시리아 전역을 장악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7월 실시 예정인 시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과도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선거 이후 정치적 해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으로 보임.
-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리아 영주권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거주 조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망명한 주요 반정부 인사들의 후보 등록이 불가능함.<sup>36)</sup>

33)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p/nea/rls/rm/223971.htm>(검색일: 2014. 3. 27).

34) Morris, Loveday(2014. 3. 19), "Fears for Lebanon's stability as al-Qaeda builds networks," *The Washington Post*.

35) Williams, Dan(2014. 3. 5), "Israel says shot 2 Hezbollah fighters on Syrian Golan," *Reuters*.

36) Kalin, Stephen(2014. 3. 14), "Syrian presidential election law excludes most opposition leaders," *Reuters*.

## 나.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시리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하면서 분쟁 종식 이후 시리아와의 경제·외교 관계 수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시리아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시리아국민우방국 회의에 참여해왔으며, 2012년 12월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당시 야권 통합세력인 시리아국민연합을 시리아 국민의 유일한 합법 대표로 승인하였음.<sup>37)</sup>
- 또한 우리나라는 시리아국민우방국 회의 산하 경제재건 작업반(Working Group on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의 공동의장국으로 2013년 12월 서울에서 제3차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 회의를 개최함.
  -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 공동의장국은 한국, 독일, UAE 3개국이고, 제1차 회의는 2012년 5월 UAE에서, 제2차 회의는 2012년 9월 독일에서 개최되었음.
  - 회의는 향후 대시리아 지원의 5대 중점 분야(platform)인 공여국간 시리아 지원 조율, 경제재건 및 민간 참여, 농업 및 식량 안보, 에너지, 식수 및 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 및 방안을 논의함.<sup>38)</sup>
- 시리아 분쟁 종식 이후 한·시리아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교역 확대, 경제재건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경제적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시리아는 마케도니아, 쿠바, 대만 등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은 4개 국가 중 하나임.
- 한편 우리나라는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작업계획그룹에도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화학무기 폐기와 검증 작업에 100만 달러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임.<sup>39)</sup>

■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리아 분쟁 종식 이후 경제재건 프로젝트에 국내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UN 전문가에 따르면 시리아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 120만 호 재건에 220억 달러, 전력·수도·가스 등 기타 인프라 재건에 60억 달러 등을 포함하여 총 8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sup>40)</sup>
- 그러나 시리아 분쟁이 종식되고 시리아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임. **KIEP**

37) 외교부(2012. 12. 14), 「시리아 국민연합」 승인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보도자료.

38) 외교부(2013. 12. 12),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 회의 개최를 통해 분쟁 종식후 시리아의 미래를 논의하다」, 보도자료.

39) H.E. Yun Byung-se(2013), "Opening Remarks," 3rd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of the Group of Friends of the Syrian Peopl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December 12)

40) Arnold, David(2013. 7. 1), "UN Experts Estimate Syrian Reconstruction at \$80 Billion - So Far," *Voice of America*, Surk, barbara(2013. 5. 17), "Syria Ex-Minister Leads Rebuilding Plan," *Associated Press*, <http://bigstory.ap.org/article/syria-ex-minister-leads-rebuilding-plan>(검색일: 2014. 3. 17).